

## 12. 第3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의 基調

資料提供：建設部·國土開發研究院

### 1. 계획수립의 추진경위

#### 가. 국토계획의 성격

- 국토종합개발계획은 경제·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더불어 중앙정부 주관의 범부처적 국가 계획
- 계획 수립의 목적은 인구와 산업의 배치,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정책 등 국토개발의 골격에 대한 장기적 방향 설정
-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·시행된 바 있으며 현재는 1991년말을 목표연도로 하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시행중

#### 나.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추진 경위

##### ○ 전담작업반의 구성

- 국토개발연구원에 전담작업반(9개 분야 73명)과 각계 인사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(7개 분야 106명) 구성: '90. 1
- 관련부처의 실무계획반 구성: '90. 5

##### ○ 계획시안 작성

- 관련기관의 장·단기 계획 및 정책 취합: '90. 5~11
- 제1차 계획시안 작성: '90. 9
- 자문위원회 개최: 총 22회

- 정책토론회 개최: '91. 3. 12~3. 14
- 관련기관협의(중앙부처, 시·도, 연구기관, 민간단체 등 89개 기관): '91. 4~8

○ 향후 계획

- 공청회 개최(중앙 및 지방): '91. 8~9
- 국토계획심의회 및 국무회의 심의, 확정, 공고: '91. 9~12

## 2. 국토의 여건

### 가. 자연적 여건

○ 위 치

- 아시아대륙 동북단의 반도로서 중국, 소련, 일본과 접하는 환태평양의 지정학적 요충지
- 남단은 북위 33°6'(제주도 마라도), 북단은 북위 43°00'(함북 온성군) 서단은 동경 124°11'(평북 마안도), 동단은 동경 131°52'(독도)로서 위도상 10°, 경도상 8°의 범위

○ 영 역

- 길이 약 1,000km에 달하는 반도와 3,200여개의 도서로 구성
- 총면적 약 22.1만km<sup>2</sup>, 남한은 45%인 9.9만km<sup>2</sup>
- 간석지를 포함한 대륙붕 면적 약 50만km<sup>2</sup>

○ 기 후

- 동계는 한냉건조, 하계는 고온다습한 온대계절풍 기후
- 평균기온 5°C~15°C(남부 10°~15°, 중부 10°~12°, 북부 5°~10°)
- 년강수량 500mm~1,500mm(남한은 1,274mm, 북한은 1,000mm 이하)  
총강수량의 2/3가 여름 3개월에 집중
- ※ 일본 1,000mm, 미국 750mm, 세계평균 750mm

○ 지 형

- 65.3%가 산지이고 차랑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동쪽은 급경사, 서쪽은 완경사
- 생산지대는 대부분 침식평야로 이루어졌고, 동해안은 단애, 서남해안은 사주, 渴湖, 사구발달

○ 산지·하천·해안

- 산지는 62.5%가 경사도 30° 이상, 15° 이하는 2.4%(1,556km<sup>2</sup>)에 불과하며 비옥도가 낮아 목재생산, 수원함양 기능 취약
- 하천은 구배가 급하고 流況이 불안정하여 용수의 안정적 공급 제약 및 홍수위협 상존
- 해안선은 동해안은 용기하여 수심이 깊고 단조로우나, 서남해안은 리아스식 침강해안으로 간석지가 발달

○ 천연자원

- 종류는 많으나 매장량과 경제성 부족

나. 경제·사회적 여건

○ 인 구(1988)

- 전체: 63,805천명(북한 21,830천명), 밀도 289/인km<sup>2</sup>
- 남한
  - 41,975천명으로 세계인구의 0.8%, 밀도는 423인/km<sup>2</sup>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, 홍콩을 제외하면 방글라데시, 바레인, 대만에 이어 세계 4위
  - 증가율: 3.01%('60), 1.99%('70), 1.57%('80)에서 '88년에는 0.97%
- 2만 이상 도시인구비율은 1960년 35.8%에서 1988년 77.8%로 증가(연 122만명씩 증가), 수도권 인구는 40.9%(서울 24.6%)로 연 증가율은 3.5%
- 경제활동인구: 17,305천명으로 이 중 60.2%(10,414천명)가 남자, 여성경제활동인구는 '60년 21.9%에서 '88년 39.8%로 증가

○ 경 제(1990)

- GNP 168조원(경상), 1인당 5,569 \$

-수출 631억 \$, 수입 651억 \$

-산업별 생산: 1차 9.1%, 2차 29.7%, 3차 61.2%

○ 국토이용

-국토면적: '80~'88 기간중 연평균 35km<sup>2</sup> 증가

-용도('88): 산림지 65.4%, 농경지 21.55%, 도시용지 4.3%(대지 1.9%, 공장용지 0.3%, 공공용지 2.1%), 기타 8.8%

-국토경제력: 130만 \$/km<sup>2</sup>(일본의 1/5)

〈국토경제력 비교: 1987〉

구 분	단 위	한 국	일 본	서 독	이태리	프랑스
국토경제력	만 \$/km <sup>2</sup>	129.7	631.6	450.8	249.6	159.8

〈주요지표 변화추이〉

구 분	단 위	1960	1970	1980	1990
국 토 면 적	km <sup>2</sup>	98,500	98,477	98,992	99,274
인 구	천인	24,989	31,434	37,436	42,869
인 구 밀 도	인/km <sup>2</sup>	254	320	378	427
도 시 인 구	천인	8,947	15,652	24,876	32,657*
도 시 화 율	%	35.8	49.8	66.4	77.8*
1 인 당 GNP	경상, \$	94	252	1,592	5,569

주: \*는 1987년

### 3. 국토개발의 성과와 문제점

#### 가. 국토계획의 추진상황

- 1960년대까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또는 개별사업계획에 의거하여 국토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나 1970년대부터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안목에서 국토개발정책 수행

- 다만 제1차 및 제2차 국토계획은 경제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동시 추구라는 당시로서는 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했고 그 필연의 결과로서 기대했던 목표의 달성에 미흡

〈국토이용개발계획의 변천〉

구 분	제1차 국토계획 (1972~1981)	제2차 국토계획(원안) (1982~1991)	제2차 국토계획(수정) (1987~1991)
책정시점의 1인당 GNP	\$ 319('72)	\$ 1,824('82)	\$ 3,110('87)
배 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력의 신장</li> <li>• 공업화 추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구의 지방정착</li> <li>• 수도권외의 과밀완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반영</li> <li>• 생산과 생활공간의 광역화 현상에 대응</li> </ul>
기본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토이용관리의 효율화</li> <li>• 개발기반(SOC)의 확충</li> <li>• 국토자원 개발과 자연의 보호·보전</li> <li>• 국민생활환경의 개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</li> <li>• 개발가능성의 전국적 확대</li> <li>• 국민복지수준의 제고</li> <li>• 국토자연환경의 보전</li> </ul>	좌 동
개발전략 및 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규모 공업기반의 구축</li> <li>• 교통통신, 수자원 및 '에너지' 공급망 정비</li> <li>• 부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기능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과 지역생활권 조성</li> <li>• 서울, 부산,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</li> <li>• 지역기능강화를 위한 교통·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</li> <li>• 후진지역의 개발촉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핵구조 형성</li> <li>• 광역통합개발방식의 도입</li> <li>• 공공투자의 지역간 적정 배분</li> <li>• 후진지역의 개발촉진</li> <li>•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 참여 확대</li> </ul>
특징 및 문제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점개발방식의 채택</li> <li>•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초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양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</li> <li>•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 지속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도권의 성장억제 및 지역경제권 육성에 의한 국토균형발전 추구</li> <li>•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한 수도권 성장의 지속</li> </ul>

## 나. 국토개발의 성과

- 국토경제의 지속적 성장기반 형성 및 국민생활의 향상
- 특히 산업기반의 구축, 간선교통망의 형성, 수자원의 종합개발, 국민휴양공간의 조성, 국토이용관리체계의 확립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대폭 확충과 국민개발의 제한적 기반 정비

부 문	주 요 성 과
산업기반의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동남해안공업벨트, 지방공단 등 조성·개발</li> <li>• 공업용지: 102km<sup>2</sup>(’71) → 317km<sup>2</sup>(’88)</li> </ul>
교통망의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고속도로: 656km(’71) → 1,551km(’88)</li> <li>• 전 산 망: 0km(’71) → 524.5km(’88)</li> <li>• 항만하역능력: 19백만톤(’71) → 185백만톤(’88)</li> </ul>
수자원의 종합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대강 유역의 종합개발 추진</li> <li>• 다목적댐 건설: 350백만m<sup>3</sup>(’71) → 14,809백만m<sup>3</sup>(’88)</li> </ul>
국민생활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수도 보급율: 35.5%(’71) → 74.2%(’88)</li> <li>• 하수 처리율 : 0%(71) → 25.0%(’88)</li> <li>• 주택재고: 4,388천호(’71) → 6,701천호(’88)</li> <li>• 국립공원: 8개소(’71) → 20개소(’88)</li> </ul>
국토이용관 리체계 확 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토이용관리법, 산업기지개발 촉진법, 환경보전법 등 국토이용관련법령 제정</li> <li>• 개발제한구역의 설정관리: 5,397km<sup>2</sup>(국토의 5.5%)</li> <li>• 종합토지세제, 개발부담금제, 토지초과이득세제, 공시지가제도 등 토지 공개념 확대도입</li> </ul>

### 다. 국토개발의 현안문제점

지난 30년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급격했던 도시화, 공업화의 부작용으로 국토의 불균형 성장,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, 국민생활환경부문의 상대적 낙후, 국토환경의 오염 등 사회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#### ○ 국토의 불균형과 국토이용의 비효율

－수도권과 지방, 지역간, 도시계층간 및 도·농간 격차 문제

##### • 수도권 집중현황('90)

면 적	인 구	제조업 종업원	금융대출	대기업본사	자 동 차
11.8%	42.7%	48.8%	62.9%	95.9%	62.3%

##### • 수도권 인구 및 제조업 집중추이

구 분		'70	'80	'90
인 구 (천명, %)	전 국	31,435	38,124	42,869
	수도권(서울)	28.3(17.6)	34.9(21.9)	42.7(24.4)
	지 방	71.7	65.1	57.3
제조업체 (개, %)	전 국	24,114	30,823	65,684('89)
	수도권(서울)	32.8(24.7)	43.8(24.8)	58.8(27.7)
	지 방	67.2	56.2	41.2

-대도시·중소도시·농어촌간 고용·산업·생활환경부문의 격차가 지속되고, 특히, 충북·경북북부·경남서부·다도해 등은 소득기반과 생활기반 취약으로 인구가 연평균 3% 이상 감소

〈개발수준 비교〉

지 표	대 도시	중소도시	군 지역
인구증가율('85~'90)	2.11	4.93	1.72
천인당 2·3차 산업 고용자(인)('87)	273.2	201.7	93.4
도로포장율(%)('89)	79.9	81.7	31.9
청장년 인구비율(%) (20~44세)('87)	44.2	42.1	10.3
10,000인당 병상수('88)	31.7	35.9	10.3
상수도 보급율(%)('89)	97.0	87.0	28.5

-지역간 도시계층간 격차에 따른 비용급증

- 과밀지역: 교통난·범죄·공해 심화 및 재정부담 급증, 지가·주택가 급등 및 전국적 확산 선도, 생활비 증가, 과소비 풍조 확산 등 경제불안 유발
- \* 수도권의 신규증가 인구수용을 위해 연 15만호 이상 주택건설 필요
- \* 전국도로 애로구간의 70%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

〈주요 도시의 아황산가스 농도('89)〉

(단위: PPM)

서울	부산	대구	광주	울산
0.056	0.047	0.048	0.021	0.029

※ 자료: 환경청

〈자동차 평균주행속도(peak시)〉

도 시	1987	1991	1996
서울(km/h)	15.2	9.5	7.2
부산(km/h)	18.0	10.6	8.1

※ 자료: 교통개발연구원



〈인구 만인당 범죄건수〉

(단위: 건)

구 분	1975	1980	1988
서울	99.8	105.3	69.5
수도권	83.1	88.9	60.8
전국	64.4	80.5	56.3

- 과속지역: 소외감 유발, 학교·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과 자원의 낭비
- 특히 지역간 불균형은 국토통일에 대비한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역작용
- 도로·항만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애로요인 발생
  - '90년 지역간 도로교통 혼란비용 2조 2천억원 추정
    - 경부고속도로 서울-부산간 소요시간: 5시간('80)→8~10시간('90)
  - 향후 10년간 대도시 교통혼란비용 148조원 추정(교통개발연구원)
- 생활기반시설 낙후
  - 인구증가, 핵가족화, 도시화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사회불안 야기
    - 주택보급율 75.1%('90 추정)에 불과
    -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거안정 저해 및 계층간 격차 확대
  - 상·하수도 보급율 낙후
    - '89년 상수보급율 78%, 하수처리율 28%
  - 문화·여가시설 부족
    - 1인당 도시공원 면적(m<sup>2</sup>): 서울 16.9, 런던 30.4, 워싱턴 45.7
    - 일본대비 체육시설 이용인구: 운동장 3배, 수영장 5.6배, 체육관 10배
- 지가급등과 토지투기로 인해 자금 흐름의 왜곡, 근로의욕 감퇴, 계층간 갈등 유발 등 국민경제적 부담가중
  - '80~'89년 평균 지가상승율 16.2%
  - '80~'88 국토면적 대비 토지거래량 6.3%로 일본의 10배
  - 택지가격지수(택지가격/1인당 GNP): 한국 0.087, 일본 0.027, 영국 0.002
  - GNP대비 국토가격('88): 미국(60~70%), 영국(2배), 일본(4.8~6.5배), 한국(6.7배)

- 환경오염 심화와 전국적 확산으로 생활의 쾌적성 저해
  - 주요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등, 대기오염 환경기준치 초과
  - 주요 상수원(팔당, 대청, 물금, 금강, 영산강 등)의 수질: 2~3급
  - 대도시 하천의 하천기능 상실 및 쓰레기 급증과 처리시설 부족
    - '85년 이후 일반폐기물 연 8%씩 증가

## 라. 문제발생의 원인

- 경제발전 우선의 정책수행
  - '60년대 이후 경제성장 최우선 정책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경부축 중심으로 투자효율이 높은 제조업부문 집중 투자
  - 결과적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, 경부축 이외지역과 국민생활 환경부문 등의 낙후 초래
-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및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대
  - 연평균 120만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 서 도시용지와 각종 기반시설의 수요급증
    - 연간 늘어나는 도시인구 수용을 위해서 주택 연 30만호 이상(멀실주택 감안 시 40만호 이상), 택지 연 900만평 이상 소요
      - \* 우리 경제의 적정 주택건설능력 연 47~52만호 추정
    -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지역 집중으로 이들 지역의 주택, 도로, 상하수도 등 수요 증가
  - 경제규모의 증대로 교통 등 기반시설 수요 및 각종 환경오염 급증
    - '81~'88기간중 국내여객 1.4배, 국제여객 2.0배 증가
    - '81~'88기간중 국내화물 1.7배, 국제화물 1.9배 증가
- '80년대의 국토개발 투자율 저하
  - 총자본 형성대비 국토개발투자율이 '82년 55%에서 '89년 34%로 저하
    - GNP대비 도로투자율: 1.53%('72~'81) → 0.74%('82~'89)
    - GNP대비 항만투자율: 0.4%('72~'81) → 0.1%('82~'89)

○ 정책수행의 차질과 시행착오

-정책의 일관성, 종합성, 장기성 부족 및 정책의지 미약

-택지공급 부족, 사회간접자본 시설부족 등 경제·사회적 수요변화에 적절 대처 미흡

## 4. 여건변화와 국토의 대응과제

### 인구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

○ 인구는 2020년경 5,060만 수준에서 정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'92~'2001년중에는 약 390만 증가 전망

○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GNP 및 물동량 지속 증가

-1인당 GNP 5,569 \$ ('90) → 17,760 \$ (2001)

(연평균 실질 성장을 7%, GNP 디플레이터 4% 수준)

-수출액 645억 \$ ('90) → 1,800억 \$ (2001)

-'92~2001기간중 여객수송수요 1.4배, 화물수송수요 1.8배 증가

• 자동차수: 340만대('90) → 1,200만대(2001)

### 도시화·공업화의 진전

○ 도·농간의 격차는 2005년경에 해소되고, 도시화율은 2010년경에 90%선에서 안정될 전망

-인구정지 시점이 2020년까지 약 950만명의 도시인구 증가 예상

-도시용지 수요증대 및 교통발달로 생활공간의 광역화

-2001년까지 주택보급을 92.8% 달성을 위해 택지 약 1억 2천만평 소요

○ 도시화의 완료 시점과 때를 같이 하여 공업화 과정도 완료, 그 이후는 공업구조 및 체질개선 등이 주요 과제

-'92~2001중 공업생산액 3배 증가, 공업용지 약 3000만평 신규소요

※ 향후 늘어나는 도시인구와 공업용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국토개발의 중요 과제

〈도시화율의 장기전망〉

(단위: 천명, %)

구 분	1988	2001	2010	2020
전국인구	41,975	47,150	49,683	50,578
도시인구	32,657	40,643	44,566	45,520
농촌인구	9,318	6,507	5,117	5,058
도시화율	77.8	86.2	89.7	90.0

### 첨단화·정보화와 기술의 혁신

-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산업, 저공해성 산업, 자원절약형 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주도
  - 첨단산업부문의 대 국민총생산 비중이 1987년 8.3%에서 2000년에 33% 수준으로 증가
  - 이들 산업 유치지역은 성장하고 재래산업 고수지역은 침체 전망
  - ※ 과거에 국가산업발전의 핵심지역이었던 영국의 “웨일즈”, 서독의 “루르” 지방이 오늘날 상대적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음.
- 국가공간구조 재편 가능성 증대
  - 첨단기술은 전국의 교통 접근성, 정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현재의 낙후지역의 개발 잠재력 향상에 기여

### 지방화, 분권화의 정착

- 지방발전 가속화
  -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시민의 공동체의식과 자립의식 고양
  - 지역간의 개발경쟁 분위기 확산 및 지역발전 노력 증대

- 국토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의 도입과 경영의 민영화가 확대될 전망
  -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활용하는 개발방식 활성화
- 반면 지역격차 확대 및 국토개발에 있어 국가적 통합성 저해도 우려
  - 지역간에 재정력, 리더쉽, 인구구성, 기반시설, 접근성의 차이 등 개발여력 차이 상존 및 지역할거주의 팽배
  - 지방의 자발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국가의 통합성 유지를 위한 조정·통제장치 구축 필요

**국제화·개방화의 전개**

- 국제교류의 확대 및 국제적 지위 향상
  - 국제경제의 개방화와 이데올로기 대립 종식으로 동구권과 중국과의 교류 확대 및 한반도의 지정학적 잇점 부각
- 농촌의 침체 가속화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도 우려
  - 농산물과 서비스산업 등의 국제경쟁력 취약
  - 국제적인 자원보호주의 경향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
- 따라서 지정학적 잇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농촌구조의 근본적인 개편과 자원절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노력 필요

**국민생활 양식과 의식구조의 변화**

-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선진화
  - 고소득화, 고학력화, 여가시간의 증대 등에 수반하여 “양보다는 질의 추구”, “개성과 다양성의 가치증대”, “건강과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의 고조”
- 이에 따라 주택,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기본수요, 국민체육, 여가공간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전통문화의 보전, 환경보전 등이 국토개발의 핵심적 과제로 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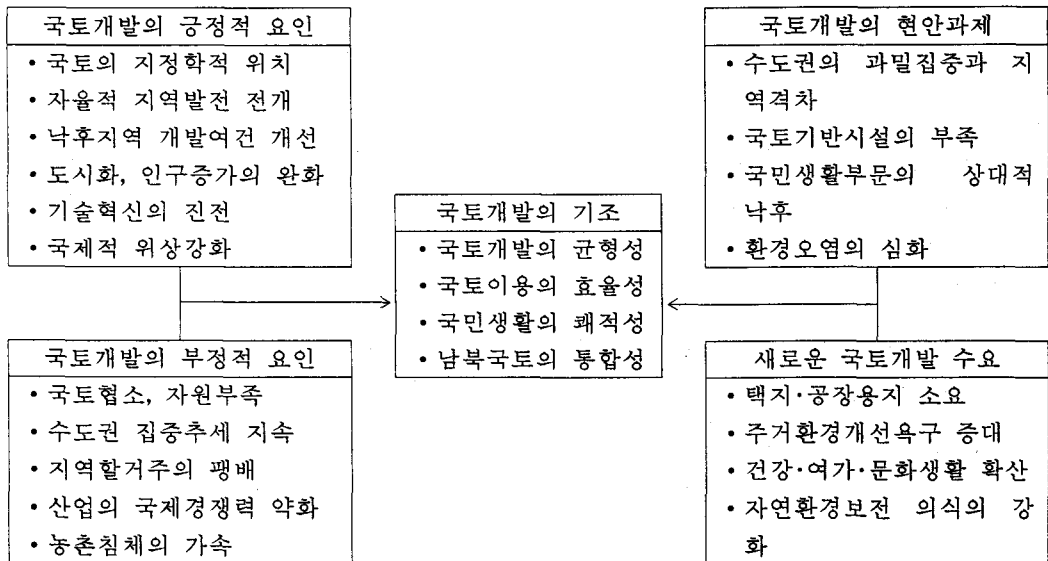
## 국토 통일 여건의 성숙

- 소련, 중국과의 관계개선 등으로 남북통일의 외적 장애요인 해소 및 국가발전으로 통일역량 증진
-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국토통일을 지원할 수 있는 점진적, 단계적인 남북교류의 확대방안과 통일후에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해소방안 강구 필요

### 5.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와 전략

#### 가. 계획의 기초

- 제3차 국토계획은 우리 국토 고유의 특성과 '90년대의 여건변화에서 비롯되는 국토개발의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긍정적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당면한 현안과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개발수요에 적절히 대처함으로써,
- 국토개발과 국민생활의 안정기반인 균형성, 효율성, 쾌적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여망인 국토통일에 기여함을 기조로 함.



## 나. 기본목표와 전략

### (1) 기본목표

- 지방분산형 국토골격의 형성: 지방의 상대적 침체를 극복하고 수도권의 과밀집중을 완화하며 분권화·자율화 추세를 추진·정착시킬 수 있도록 균형된 국토공간 형성
- 생산적, 자원절약적 국토구조의 확립: 국제화의 첨단화·고속화 등의 여건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자원 절약적이며 효율적인 산업구조와 국토기반시설 체계 구축
- 국민복지의 향상과 환경보전: 생활의 질적 고도화를 향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생활환경부문의 상대적 낙후를 해소하고 자연환경 보전
-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의 조성: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국토공간의 이질성을 단계적으로 극복하여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남북통일의 기반 조성

### (2) 전 략

-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의 집중억제
  - 종래의 수도권 억제를 통한 소극적인 국토균형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집중육성에 의해 자발적인 인구와 산업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국토균형개발 방식 채택
  - 이를 위해 지방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집중육성하고, 특수기능의 신도시를 개발하여 지역발전 선도
- 신산업지대의 조성과 산업의 구조개선 촉진
  - 국토의 중서부와 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지대를 조성함으로써 국토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국제화·개방화에 대처
  - 동남부 기존 공업벨트의 산업구조 고도화, 첨단업단지와 연구·교육단지의 전국적 조성 및 산·학·연의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
- 종합적 고속도로망의 구축

- 대도시와 신산업지대 등을 연결하는 고속교류망을 대폭 확충하여 국내외 물동량과 정보의 신속한 흐름을 도모하며 국제항만, 항공을 대폭 확충하여 국제화, 지방화에 효율적으로 대처
- 고속도로, 철도, 공항, 항만 등 교통시설간의 통합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하여 교통효율 제고
- 국민생활·환경부문의 투자확대 및 제도확립
  - 그간 상대적으로 침체되었던 주택·상하수도·환경 등의 부문에 대한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
  - 국토이용 및 환경보전과 관련되는 각종제도를 정비하여 국토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토지의 공개념 정착
- 국토계획의 집행력 강화
  - 국토개발의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계획과 집행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국토계획의 위상 제고
  - 국토개발의 추진에 있어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중앙과 지방 및 민간부분간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지역개발 역량 제고
- 통일을 향한 남북 교류지역의 개발관리
  - 남북 접경지역에 남북교류공간을 조성하고 민통선 지역의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남북통일의 기반 조성
  - 단절된 남북교류망을 복원·개발하고 수자원·환경분야 등에서 남북공동개발사업 추진

#### 다. 주요정책사업의 추진

- 기본목표와 전략의 효과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사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함으로써 국가재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계획의 효율적 집행 도모
- 주요사업의 선정기준
  - 사업의 규모가 방대하여 국가재원의 집중적 대량투입을 요하는 사업



-사업의 내용이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관련부문간의 체계적 연계가 필요한 사업

-국토계획의 목표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○ 사업추진전략

사업명	필요성	개발전략
1. 신산업지대 및 첨단산업단지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역균형개발촉진</li> <li>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업단지 조성 및 용수·항만·도로·첨단 정보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배후도시의 연계개발</li> <li>대학·연구소의 육성과 첨단산업 유치 및 산·학·연·관 연계체계 강화</li> <li>개발촉진을 위한 제3섹터 도입 및 기구설치 등 추진기구 마련</li> </ul>
2. 국민여가지대의 조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여가수요에 대처</li> <li>지역발전의 촉진</li> <li>금강산과의 연계개발에 대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위락체육시설의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</li> <li>전국 대도시와의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</li> <li>관광지 배후 휴양도시의 건설</li> <li>종합개발계획 수립·시행</li> </ul>
3. 전국간선고속도로망이 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분산형 국토골격 형성 촉진</li> <li>고속도로수요 급증에 대처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기적으로 7개의 남북축: 9개의 동서축 형성(2001년까지 고속도로 1,400km 건설)</li> <li>대량교통축에 고속전철과 철도의 단계별 건설·확충</li> <li>신산업지대, 국민여가지대, 신도시 등의 접근노선 우선건설</li> <li>교통·통신시설과의 연계성 강화</li> </ul>
4. 권역별항만체계 구축 및 국제공항 확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외 물동량 증가에 대처</li> <li>생산적인 국토기반의 구축</li> <li>국제기능의 보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권역별로 거점항만 개발·확충 및 항만별 기능 특화 유도</li> <li>동북아지역 중추공항 건설 및 권역별 국제공항 확충</li> <li>신산업지대·국민여가지대와 연계성 강화 및 국제적 기능 보강</li> </ul>

사업명	필요성	개발전략
5. 주택 540만호의 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보급율의 제고</li> <li>• 서민생활수준의 향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주택유형별, 규모별, 공급체계 정립</li> <li>• 계획 전반기에는 소형중심건설, 후반기에는 규모 다소 확대</li> <li>• 주택자재·인력수급 및 재원조달방안 강구</li> <li>• 시장기능 활성화 및 민간참여의 활성화 방안 강구</li> </ul>
6. 유역별 수자원의 종합관리 체계구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·체계화</li> <li>• 환경오염의 완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유역별 환경, 수질, 수량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추진</li> <li>• 유역별 관련계획의 조달</li> <li>•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조성</li> </ul>
7. 중소도시의 주력산업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발전의 선도</li> <li>• 산업구조 고도화</li> <li>• 지자체에 대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도시별 주력산업의 선정 및 주력산업단지의 조성</li> <li>• 산·학·연의 연계로 기술 고도화</li> <li>•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</li> </ul>
8. 접경지역의 개발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남북통일에 대비</li> <li>• 소외지역의 개발관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민통선 지역간 주민 생활환경 개선</li> <li>• 남북교류망의 복원 개발 및 교류공간 조성</li> <li>• 공동개발사업의 수행</li> </ul>

## 라. 2001년의 국토 미래상

- 전국 인구는 1990년보다 428만명이 증가한 4,715만명, 1인당 GNP는 3배 정도 증가한 17,760달러가 될 것이며 국토면적은 남한만으로 10만km<sup>2</sup>를 상회하게 됨.
- 수도권은 1990~2001년중 약 293만명의 인구가 신규로 증가하여 전국대비 인구 비중이 현재의 42.7%에서 45.1%로 다소 증가하게 되지만 인구집중 추세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될 것임.
- 공장용지는 2001년까지 약 3,000여만평이 신규조성, 공급될 것이며 약 1,400km의 고속도로, 2억 3천만톤의 항만 역할능력 증강 등 기반시설이 건설되어 산업의 첨단화와 국내의 수출수요의 증대에 대처하게 될 것임.

〈2001년의 국토미래상(지표)〉

구 분	지 표	단 위	1990	2001	
총 량	인 구	천인	42,869	47,150	
	1인당 GNP	\$	5,569	17,760	
인구배치	수 도 권	추세연장	천인(%)	18,310(42.7)	22,498(47.7)
		계 획	천인(%)	—	21,250(45.1)
	지 방	추세연장	천인(%)	24,549(57.3)	24,652(52.3)
		계 획	천인(%)	—	25,900(54.9)
도 시 화	도 시 화 율	%	77.8*	86.2	
공 업	공 장 용 지	km <sup>2</sup>	340**	475	
주 택	주 택 보 급 율	%	72.1	92.8	
	주 택 수	천호	7,374	12,088	
교 통	고 속 도 로	km	1,551	2,951	
	도 로 포 장 율	%	71.5	100.0	
	철도전철화율	%	16.7	50.0	
	항만하역능력	백만톤	224	420	
	자 동 차	만대	340	1,200	
	가구당 자동차	대/가구	0.3	0.8	
상하수도	상수 보급 율	%	79	90	
	하수 처리 율	%	31	70	
수 자 원	총용수이용량	억m <sup>3</sup>	249*	330	
여 가	여가활동참여량	백만인/년	279*	530	

주: \*는 '88년 기준

\*\*는 '89년 기준

- 국민생활환경과 관련하여서는 약 540만호의 신규주택이 건설되어 주택보급율은 보통가구 기준으로 90년 현재의 72.1%에서 92.8%로 증대될 것이며 상·하수도 부문 등에서도 보급율의 현저한 상승을 시현하게 될 것임.
- 지역개발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중서부, 서남부지역에는 새로운 산업지대가 형성되고 강원도와 경북북부지역, 제주도 등지는 국민여가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현존하는 지역격차를 완화하게 될 것임.
- 단절되었던 남북간의 연결통로가 개통되고 공동개발사업이 추진되어 남북간의 국토공간의 이질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임.